



보도시점 2023. 7. 31.(월) 16:00 배포 2023. 7. 31.(월) 10:00

“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” 한덕수 국무총리,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
- ◆ 하반기 대테러활동 계획: 위해요소 차단, 대비태세 유지 위한 6개 중점과제
- ◆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(화생방위험 의심·추정 물질) 대응절차 논의
- ◆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보안 강화대책
- ◆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대비

□ 정부는 7월 31일(월)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다.

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
○ 오늘 회의에서는 「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」을 반영한 「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과 「‘테러정보 발령 규정’ 개정안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

- 「항공보안 강화대책」, 「에너지시설 新 위협 테러 예방·대비 추진」을 보고하였으며, 특히 최근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「미지시료(화생방위험 의심·추정 물질) 대응절차」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“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체계적 테러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능력·태세 구축”을 당부했다.

① 2023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'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'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 - ①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
 - ②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
 - ③ 테러대상시설·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
 - ④ 테러 대응역량 향상 및 對국민 홍보 강화
 - ⑤ 법령 개정, 인력·장비 확충 등 대테러활동 기반 보강
 - ⑥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

<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경과 >

-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/F를 구성하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, △법령·제도 개선 △시설별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△안티드론 연구 개발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.
 - 특히, 안티드론시스템(탐지·식별 및 무력화) 긴급 설치가 필요한 공항 등 핵심시설 24개소를 선정하여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.

② 항공보안 강화대책 (보고)

-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항공 보안사고는 철저히 예방하면서 여객 편의는 제고하는 「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」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③ 에너지시설 新 위협 테러 예방·대비 추진 (보고)

-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호체계 구축 및 테러대응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④ 미지시료(화생방위험 의심·추정 물질) 대응절차 (보고)

-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, 미지시료에 대한 대응 체계를 논의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신양수 (044-2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사무관	전지원 (044-200-2034)

